

〈제 709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 창립 54주년 기념식 개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8일 본점에서 창립 54주년을 맞이해 송종욱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감사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 기념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광주은행의 54년을 위해 성원을 보내준 감사고객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우수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광주은행의 지난 54년 역사를 돌아보고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됐다.

## 기아 AutoLand광주

### ◆ 제4회 K-페스티벌 개최



기아 AutoLand광주는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지식 나눔의 장 '제4회 K-페스티벌'을 개최했다. K-페스티벌은 일반직 부서 및 개인별 우수 개선 사례 발표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임직원들이 함께 지식을 공유해 AutoLand광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기아 관계자는 "AutoLand광주 개선사례 발표회인 K-Cube에 더욱 많은 임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개최한 K-페스티벌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며 "기아 AutoLand광주는 K-페스티벌을 임직원들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재미를 공유하는 임직원들의 축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 무송지오씨

#### ◆ 우즈벡 광통신망 공동 구축



무송지오씨(대표이사 박인철)가 광주지역 광통신 6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즈베키스탄 FTTH(택내 광통신망) 사업에 공동 진출해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무송지오씨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 본부에서 우즈텔레콤, 지오씨우즈, 타슈켄트 인하대학교, 코트라(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 컨소시엄 참여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FTTH사업 공동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박인철 대표이사는 "무송지오씨가 지난 2013년도부터 인도네시아,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노하우를 광주지역 광통신 업체들과 공유하게 됐다"면서 "KOTRA의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컨소시엄 마케팅 지원 사무소까지 개소한 만큼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랑방미디어

#### ◆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 선출



조덕선 사랑방미디어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지사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18일 조덕선 사랑방 미디어그룹 회장 등 7명의 신임 상임위원을 선출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5년 11월 17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조덕선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임원 선출, 소속기관의 설치, 폐지, 및 예·결산, 적십자 회비모금 계획 등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덕선 회장은 "수년간 코로나 상황에도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을 적극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 광주전남지사의 발전을 위해 여러 상임위원

들과 함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1차 인권경영위 개최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사장 박성수)은 지난 14일 인권경영 외부위원과 이사장,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기관의 인권경영 정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이번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 진행현황 및 계획 ▲인권경영 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위원장 선출 ▲2022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검토 및 확정 순으로 진행됐다.

박성수 이사장은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예방하고 지속적인 인권경영활동을 추진해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지역 중추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 특별기고

# 노후 산업단지 혁신



황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국가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들의 중추적 역할에 의미를 담은 ‘산업단지의 날(9월 1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준 것은 산업단지였다.

국내 전체 제조업 생산·수출의 67%, 고용의 49%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버텨온 만큼 각종 산업시설과 인프라는 노후화되는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착공 20년이 경과한 국가·일반 산업단지(2022년 기준)가 총 172개에 달한다.

전세계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과거 명성을 이어갈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

이러한 산업의 이미지는 취업기피로 인한 청년·인재 유입의 걸림돌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임과 동시에 산업단지 내 환경조성사업이 시작될 배경이다.

이러한 사업은 산업단지가 단순 생산을 위한 물리적 공

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도이다.

국가·지역 경제성장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우수한 청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혁신역량 뿐만 아니라 근로·정주환경 개선사업은 필수적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한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산업 내 업종 고도화와 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산업단지를 일터이자 살터가 함께하는 복합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후산업단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산업단 구조고도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착공 기준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입주기업 제조기반 확충을 비롯한 편의, 복지, 정주시설을 확충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산업단지 내 청년층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지역본부는 2017년부터 광주, 전남(함평, 장성), 제주지역 대상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환경개선펀드, 민간대행사업, 정부출연 산단환경개선사업 등 17개 사업, 총 사업비 1조324억원(국비 1155억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구조고도화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환경개선펀드, 민간대행사업)은 광주지역 대표 노후산업인 하남일반산업단, 평동일반산업단에서 추진 중이다.

제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직주근접을 위한 오피스텔 건립, 근린생활시설 등 6개 사업 9561억원의 사업을 추진해 산업과 복지분야

의 구조고도화 Value Chain(가치사슬)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환경개선펀드사업은 노후산업단의 혁신을 위한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국비(펀드)를 매종별로 해 민간투자사업을 선정, 속도감 있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 다음으로 정부가 출연하는 산단환경개선사업이다. 이 사업은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조성, 혁신지원센터, 휴·패업 리모델링사업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공모사업들로 분류되며, 광주본부는 11개 사업, 763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첨단국가산단에는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본촌일반산단과 소촌농공단지도 착공이 예정돼 있다. 본촌산단, 함평 학교농공단지, 제주 대정·금능·구좌 농공단지는 올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돼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산업단지를 둘러싼 분위기는 점점 변화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시설 중심으로 조성돼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던 산업단지가 다양한 환경조성사업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편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친화적 환경으로 변모해 가는 중이다.

산업단지의 재편을 위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공동화 현상 및 고립화가 해소돼 중소기업의 직원 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이동편의와 공공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노후산업단지의 혁신은 산업단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과 동시에 청년이 찾고 싶은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미래가 기대된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 I. 입원사 동정

## II. 광주경충 소식

### 〈제1579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김성녀(국악인/ 동국대 석좌교수) 주제: 우리극(劇), 우리소리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1월18일 광주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김성녀 동국대 석좌교수를 초청 <우리극, 우리소리>란 주제로 제1579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부모는 연극인이시고 극단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도 연극인이다. 이모들도, 형제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연극을 한다. 그래서 의상 바구니가 침실이었고 무대는 놀이터였다. 먼지가 섞인 매캐한 극장 냄새가 고향의 냄새다.

지금은 청년들의 희망 직업 1순위가 연예인이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대중은 예술인들의 공연에 열광은 하되 사회적 존경을 보내지는 않았다. 제 무대 데뷔가 다섯 살 때다. 어머니가 하시던 역할의 아역(兒役)을 도맡아 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재일교포 위문 일본 순회공연 중이었는데 남자 역을 맡아 칼춤을 추시다가 다치셔서 저는 당장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동생과는 곡을 받아 음반을 내고 가수로도 데뷔했다. 그룹 이름은 ‘비둘기자매’다. TV도 <전원일기> <지금 평양에선> <서울 뚝배기>에 출연했다. 정극과 창극 등 거의 모든 연극공연 장르를 넘나 들며 활동을 했다. 저는 새로운 작품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제 체질인 것 같다. MBC에서 창사특집 문화프로그램에 공모해 가장 한국적인 연극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서를 넣은 것이 마당놀이다. 마당놀이와 평생을 함께하고 있고, 2011년에 초연하고 지금도 무대에 올리는 1인극 <벽 속의 요정>에서는 32역을 소화했다. 늦깎이 공부를 하여 교수가 되었고 후학에도 힘쓰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참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루를 25시간처럼 살아 온 것 같다. 거친 세월을 필사적으로 견뎌 온 남사당패와 여성국극과 국악인들의 질기고 귀한 생명력이 ‘부드럽고 강인한’ 여배우 김성녀를 만들었다.



### 사무국 일지(11.14 ~ 11.18)

11.16 (수)	●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초청 간담회	11.18 (금)	● 제1579회 금요조찬포럼 ● 전남지노위 위원장 사무국 내방
--------------	--------------------------	--------------	---------------------------------------

## 1. 노사 동향

#### ■ 경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경총은 11. 14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 전달

-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노동조합이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면 그 누구라도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누가 사용자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
- 또한 노조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헌법 제23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한다고 지적

#### ■ 양 노총, 정치권을 활용한 현안 해결 주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 14 한국노총을 방문해 현안 논의

※ 주요 참석자

(민 주 당) 이재명 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안호영 대변인, 이수진 의원 등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김현중 부위원장 등

-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 2022년 정기국회 핵심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정부정책 저지를 촉구
- 또한, 21대 국회 이후 구성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 재구성해 상설적 논의를 지속하자는 의견 전달
- 이재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노조법 개정 성과 등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입장 표명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참고] 한국노총 입법 요구사항 및 정부 정책 저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입법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li> <li>▶ 노조법 제2조 등 개정</li> <li>▶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li> <li>▶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li> <li>▶ 공무원 차별 개선 및 신분 보장</li> <li>▶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의무화</li> </ul>
정부 정책 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체계 개편 저지</li> <li>▶ 특별연장근로 반대</li> <li>▶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저지</li> <li>▶ 공공부문 구조조정 금지 등 정부정책 저지</li> </ul>

○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 15 각각 민주노총을 방문

※ 주요 참석자

(정 의 당) 이정미 대표, 이기중 부대표, 여인두 조직강화위원장 등

(민 주 당) 이재명 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안호영 대변인 등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 이양수 부위원장 등

- 양경수 위원장은 정의당과 민주당 대표에게 각각 ▲민영화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
- 이정미 대표는 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등 민주노총 요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힘.
- 이재명 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남용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



## 2. 법제 동향

### ■ 류호정 의원(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9)

- (발의 이유) 현행법(상생협력법 제22조의2)상 수탁기업은 공급원가 변동시 위탁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의 내용에 주요 원자재의 종류 및 가격,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고하도록 의무 부여  
③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변동한 경우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분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류호정 의원(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9)

- (발의 이유) 현행법(하도급법 제16조의2)상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제·개정 의무 부여  
② 하도급거래 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사용 의무 부여  
※ 경총은 ‘납품단가연동제’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 중, 11.8까지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

### ■ 이철규 의원(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1)

- (발의 이유)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납품단가 연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할 필요성 제기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주요 내용) ① ‘주요 원재료’와 ‘납품단가 연동’의 정의 규정 신설
-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발급하도록 위탁기업에 의무 부여
- ③ 다음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는 것을 허용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④ 납품대금 연동 적용을 피하기 위한 위탁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한 위탁기업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지정·지원하고,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를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

#### ■ 이주환 의원(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1)

- (발의 이유) 현재 플랫폼종사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플랫폼종사자는 복수의 사업주와 단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 단위의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플랫폼종사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월 133만원) 일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기준보수 일액을 적용하는 규정의 개정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①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변경
- ② 플랫폼종사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미적용

#### ■ 김종민 의원(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1)

- (발의 이유) 현행법(하도급법 제12조의3·제35조)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필요성과 유·무형의 기술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 방식을 규정할 필요성 제기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주요 내용) ①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
- ②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 규정 신설

#### ■ 김예지 의원(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1.14)

- (발의 이유) 현행법(기간제법 제4조)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장애예술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안정을 위해 2년 초과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장애예술인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예술인’과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2년 초과 사용을 허용

#### ■ 김성원 의원(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1.15)

- (발의 이유) 최근 원재료 가격의 상승률에 비해 위·수탁기업 간 거래시 납품대금의 상승률이 낮아,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위탁기업이 작성하는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

#### ■ 이용선 의원(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5)

- (발의 이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가입기간(5년 이상)·기업 재정 여건에 따른 정부적립금 차등 지원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법에 명시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 김희곤 의원(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5)

- (발의 이유) 현행법상 공급 원가 상승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수급자와 협의할 수 있지만 대행 협의 신청요건이 복잡하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수급사업자가 납품 대금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재료비 등이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 협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삭제

#### ■ 김형동 의원(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16)

- (발의 이유) 현행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09조)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불리한 처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과, ‘불리한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②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 요청 가능